



노루오름서 바라본 한라산 지난달 30일 제주시 노루오름 정상에서 바라본 한라산이 울긋불긋 단풍이 들며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초읽기'

도의회 특위- 제주도 추진방안 합의여부 주목
 국토부 반영여부 촉각속 금주중 세부협의 예상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시행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 쟁점이 됐던 현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 심층토론회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의견 수렴(안)을 제주도에 제시하면서 합의 여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갈등 특위)는 지난달 28일 제주도에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 수렴(안)'을 전달했다.

이번 갈등 특위가 제안한 도민 의견 수렴안은 오는 15일까지 1단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갈등 특위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인 12월 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일정이다.

이 방안 중 여론조사의 경우 3개 기관을 선정해 표본 각 3000명 이상씩 선정해 진행하고, 속의형 공론조사는 제주도가 주관해야 한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주민주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반대하고 있어 실행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빠르면 이번 주 초까지 갈등특위에서 제시한 수렴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고 회신할 예정이다.

도민 의견수렴과 관련한 세부적인 부분은 향후 협의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견 수렴 문항 선택과 관련해 양측이 어떠한 합의를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앞서 국토부와 제주도, 갈등 특위는 9월 14일 제2공항과 관련해 4개항에 대해 합의했다. 협의안에는 끝장 토론이 마무리된 후 제주도와 특위는 여론조사 등 도민여론수렴방안에 대해 협의해 진행한다 등의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는 단순히 협의를 진행한다는 것이지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는 것이 아닌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 이후 그 결과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그대로 반영되

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7월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제주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을 한다면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도민 의견 수렴 결과 반영 여부는 긍정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원철 갈등 특위 위원장은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통해 결정을 내달라는 입장"이라며 "현재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도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도민 의견 수렴이다. 제주도는 갈등 특위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빠르면 이번주 초 회신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맞춰 도와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도,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확보 발걸음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일 국회를 찾아가 국민의힘 중앙당이 주관하는 제주 현안사업 정책협의회에서 제주 현안사업과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한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내년

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본격 나섰다. 지역별로 정치권과 예산정책협의회가 가동되고 있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앞서 국민의힘이 제주도와 먼저 예

산 협의를 시작한다.

이날 협의 자리에서 도는 제주4·3특별법 개정, 제주자치경찰 존치 등의 제주도 현안사업과 2021년도 국비사업 지원에 대해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 관련 국

비는 1조5086억원 규모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년 1조4945억원에 견줘 141억원(0.9%) 늘었다.

제주도는 민주당에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제주지역 의원 보좌진들과 제주도 예산 담당자들과의 정책간담회 일정만 잡힌 상태다. 국회·부미헌기자

■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5단계로 개편 도 "방역·지역경제 모두 잡을 것"

오는 6일 세부조정안 발표
 "제주지역 특성 맞게 개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부 개편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와 관련해 제주 특성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 마련으로 방역과 지역 경제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 원칙은 준용하되, 기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사항 등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5단계로 개편하고 7일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거리두기 세분화 및 조정 기준 마련, 시설 위험도 평가 기반 단계 3단계 위험 기준(고·중·저위험)을 중점·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재 정비,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실천력 확보방안, 중앙정부-지사체간 거버넌스 강화방안 등이다.

이에따라 제주도도 중대본이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참고

하면서 기존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경험을 살려 제주 특성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도는 지난달 12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1단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단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할 점, 최근 도내 확진자 발생 동향,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로감과 지역 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다만 집합 모임·행사 규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민간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등은 6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포함한 기존 대응 사례들은 제주의 실정에 맞게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도 방역당국은 지속가능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감염병 전문가, 도내 유관부서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일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안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일(오늘) 제주형 생활방역위원회 공식 안건 상정을 거쳐 오는 6일쯤 이와 관련된 행정조치에 대한 고시·공고와 더불어 세부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공청회 방식·참석자 이번주 확정 전망

4·3특별법 전면개정안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일정을 수립한 가운데 이번 주 중 공청회 방식과 참석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1일 국회 행안위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실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번 주 중 공청회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안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제1법안소위에서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특별법 전면개정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시 갑)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2건에 대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는 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열리는데, 국회법에서는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개최를 명문화하고 있다.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모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여는 방식과, 법안소위 위원들만 참석하는 비공개 방식이 있다. 국회·부미헌기자

ON AIR

The 2nd 제2회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

Farming+ @JEJU

Online Fair & Conference

지속가능한 6차산업, 코로나19를 넘어서!

온라인 전시회

6차산업 온라인전시관
해외수출전시관

수출상담회

1:1 바이어 상담회
온라인 수출 상담회

온라인 컨퍼런스

학술 컨퍼런스
마케팅 세미나
JDC농업전략세션

부대행사

개회식 및
MOU 체결식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ICCJEJU,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DC농업기술원, KAAPF (사)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문의처 | ICC JEJU 전라사업추진단 064-735-1086